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4건)

- ① 국민권익위, 대한민국 예산 “투명성 세계 11위, 국민 참여도 세계 1위, 감시 세계 3위 기록”(22.6.13)
- ② 국민권익위,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 반영해 평가(22.6.10)
- ③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대한민국 주요 반부패정책 유럽·중앙아시아에 전파(22.6.24)
- ④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및 청렴윤리경영’ 서울지방변호사회 특별 강연(22.6.17)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044-200-7619)

국민권익위, 대한민국 예산 “투명성 세계 11위, 국민 참여도 세계 1위, 감시 세계 3위 기록”

국제예산협약체(IBP), 5월 31일 2021년도 열린예산조사(OBS) 결과 발표

(22. 6. 13. 국민권익위)

국제예산협약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열린예산조사(OBS, Open Budget Survey) 결과에서 대한민국은 ‘예산 투명성’에서 120개국 중 세계 11위(74점/100점 만점), ‘국민 참여도’ 세계 1위(59점), ‘감시’ 세계 3위(87점)를 기록했다.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다.

국제예산협약체(이하 협의체)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워싱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케냐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협의체는 세계 각국의 정부예산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예산 체계에 대한 투명성, 참여도, 감시 기능을 측정해 2006년부터 격년으로 열린예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열린예산조사 결과 중 ‘예산 투명성’ 항목은 정부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측정한다.

- 1 -

‘국민 참여도’ 항목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감시’ 항목은 의회와 사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 및 정도를 측정한다.

협의체의 열린예산조사 결과 보고서는 “대한민국은 참여 예산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국민, 시민사회, 공무원이 협력하고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예산의 개방성 및 공공데이터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투명한 예산 시스템 운영과 시민의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시민에 의한 예산 감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공적 자금 남용이 방지된다면 한국의 청렴 선진국 진입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 반영해 평가

측정항목·평가지표 확장한‘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573개 평가 대상기관에 알려

(22. 6. 10. 국민권익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을 반영해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측정항목과 평가지표를 확장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해 573개 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부터 ▲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부패공직자 징계 등 부패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는 워크숍, 간담회 등 기관 의견수렴, 각종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관유형 구분, 평가영역별 반영비중 및 점수 체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등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15개 유형, 총 573개며, 중앙행정기관은 장관급(25개), 차관급(21개)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합계 (개)	중앙행정		사·도 경찰청 (시·법)	지방자치단체			사·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립 대학	공공 의료	
	I (장관급)	II (차관급)		광역	기초			I (공기업)	II (준정부 일반)	III (준정부 중소형)	IV (중점)	V (지방 공무원)			
			I (시)		II (군)	III (구)									
573	25	21	18	17	75	82	69	17	36	57	37	30	39	33	17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반영비중은 60:40(총점 100점), 부패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감점 범위는 10점+a(정성평가)로 확정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유형별로 산정된 기관별 최종등급으로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며, 필요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의 등급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원년인 만큼 각급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 노력을 모든 영역에 걸쳐 평가요소로 포함시켰다.

청렴체감도에는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를 통한 특혜제공, 업무과정에서의 사익추구를 설문조사 항목에 반영했다.

청렴노력도에는 관련 반부패 규정 정비 및 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기관의 제도 안착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실시하는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태점검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관련 지표도 신설했다.

부패실태 평가 시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포함해 기관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대한민국 주요 반부패정책 유럽·중앙아시아에 전파

23일 온라인 간담회 통해 코소보 등 4개국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도입 성과 및 교훈 공유

(22. 6. 24.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23일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과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 정책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가 2015년부터 UNDP와 공동으로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전파해 온 협력사업의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양가 티밀시나 UNDP 글로벌 반부패 프로그램 자문관, 게르트 트로게만 UNDP 이스탄불 유럽·중앙아시아 지역허브 소장 및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 UNDP 사무소 대표가 참석해 그간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도입한 유럽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지역 간 포럼을 통해 성공사례뿐 아니라 도전요인과 시행착오를 공유함으로써 반부패 제도가 자국 내에서 자리를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지난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통합 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향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코소보와 우즈베키스탄 대표는 각국의 한국 반부패정책 도입 진행 상황 및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코소보는 2019년에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파받은 바 있다. 현재 코소보는 자국 반부패청에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범제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 입법 단계에서 법령 내에 내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

또 국민권익위는 2019년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에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전파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1월부터 대통령령81호 공포를 통해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제도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 2002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기존의 청렴도평가와 함께 종합청렴도 평가로 통합·개편해 시행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반부패정책 등 제도 도입만으로는 그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각국이 자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문제점을 시정해가며 제도의 정합성을 높여가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공유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층 높아진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게 한국이 부패 극복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이를 필요로 하는 개도국에 전파해 반부패 연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왼쪽 위: 이스탄불 지역허브 거버넌스와평화구축팀장(Team Leader, Governance and Peacebuilding Team) / 위 중간: 앙가 티밀시나 undp 반부패자문관 / 오른쪽 위: 안네 유포너 undp 소장대행 / 가운데 왼쪽: 이라클리 코테티쉬빌리 이스탄불 지역허브 반부패 공공행정 정책관 / 가운데 오른쪽: 이아정 undp 서울정책센터 정책관 / 왼쪽 아래: 게르트 트로게만 undp 이스탄불 지역허브 매니저 / 오른쪽 아래: 마토 마이어 undp 코소보 국가사무소 정책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및
청렴윤리경영' 서울지방변호사회 특별 강연**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제6차 의무연수에서 변호사 900여명 대상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등 설명

(22. 6. 17. 국민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제6차 의무연수에서 변호사 900여 명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및 미 해외부패방지법 등 글로벌 반부패 규범 대응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ompliance Program, 이하 K-CP)'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청렴도 중 경영 부문 관련 지표는 5년간 담보 상태로 적극적 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5년간 IHS Markit이 조사한 '경영활동 관련 부패'는 59점, TIU가 조사한 '공적자금 유용·계약 등 뇌물 관행'은 55점을 유지

특히 최근 기업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amp;P(S&P)의 평가 결과, 한국 기업들이 환경·사회 지수에서는 글로벌 기업을 앞선 반면, 뇌물·부패·지배구조 등의 지수에서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의 국제기준과 이 중 G(Governance)의 핵심 요소로서 반부패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기업의 ESG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K-CP*를 소개한다.

*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는 등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

전현희 위원장은 특히 우리 기업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말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고 16일 법조계·경제단체 전문가 정책간담회에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기업용 K-CP를 개발해 기업의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 진출 기업이 많아지는 만큼 기업의 투명성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도 국제사회의 반부패 기조와 해외 부패방지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